



영·유아 응급처치 이렇게 '영·유아 아동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교육'이 열린 13일, 광주 남구청 회의실에서 영·유아 부모들이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사의 CPR(심폐소생술) 시범을 진지하게 따라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민정서 외면 유급보좌관제 강행 죄송” “예산 삭감은 사업타당성 철저히 따진 것”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13일 최근 물의를 빚은 유급보좌관제 강행과 관련, “시중의 여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시민의 정서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급보좌관제를 무리하게 추진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급보좌관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점과 그 절차와 시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강운태 시장이 보좌관제 예산을 증액요구해 오면 조건 없이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의장단에 표명했고, 그 후 집행부가 예산심의 도중 법적 문제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 형식을 제안해 증액동의를 요구했지만, 결국 집행부 부동으로 예산이 성립되지 못했다”라며 “하지만 누구를 탓하기보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여론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윤봉근 의장과 정현애·이은방 부의장, 이춘문 운영위원장이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급보좌관제 강행 처리로 물의를 빚는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윤 의장은 “전체 의원들에게도 의장으로서 사과를 표명했고 대시민 사과문을 내는데 동의를 구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2011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 “각 상임위원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현실성, 타당성, 시급성 등을 따져 불필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다”며 “역

대 의회 사상 가장 많은 86억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시민의 혈세를 과다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자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도시 관련 예산은 모두 다 뜻있는 사업이고 의회도 함께 추진해 가야 할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텃밭서 혼쭐... 변화 바람 직면

회고 2010

의회 밥그릇 쟁기기 구태는 여전

2 민선 5기 출범

선거사범 905명 전국최다 오명도

2010년은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쳐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범한 해였다.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들은 6·2 지방선거와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를 통해 ‘텃밭’인 민주당 후보와 현역 단체장을 잇달아 심판하면서 지역 정치권에 대한 개혁과 변화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5기 지역 행정과 정치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화두는 ‘청렴·자정·개혁’이었고, ‘소통’과 ‘시민 참여’가 강조됐다.

하지만, 여전히 구태는 반복됐고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에는 크게 부족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주·전남 선거사범 수는 90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사범을 ‘양산’했다는 오명을 안았다.

◇민선 변화 기류=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 27개 자치단체장 중 8명이 무소속이었다. 민주당의 ‘오만과 무능’이 공천 잡음으로 이어지면서 무소속 들

풍이 거세게 불었다.

또한, 광주 남구와 전남 곡성군 등 10곳의 현직 자치단체장이 신진 후보들에게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광주시의원도 26명 중 21명(80.8%)이, 전남도의원도 62명 중 46명(74.2%)이 초선 의원들로 대폭 물갈이됐다. 민주당 소속 일색이던 광역의회도 무소속 및 여타 정당 후보 10명이 새로 입성했다.

지역민들이 이처럼 지방선거를 통해 조금이라도 안이한 시·군정을 한다면 언제든 자치단체장과 의원을 바꿀 수 있다는 ‘유권자의 힘’을 보여줬다. 또한, 민주당 독점 패배에 따른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표’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청렴·개혁, 시민참여’ 바람=민선 5기 출범 이후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퉈 청렴·자정·개혁을 내세웠다. 전임 단체장들이 구속되는 등 행정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무안군과 여수시·완도군 등 일부 자치단체는 부패적결과 청렴 서약을 하는 등 내부 자정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민선 5기 ‘광주호’의 선장을 맡은 강운태 광주시장은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며 시민의 곁을 찾고 있고, 개방형 공모 등을 통한 외부인사 영입과 새로운 시책 발굴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어려운 지방재정난 속 예산과 위주의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하는 등 개혁바람이 일었다.

대다수가 초선의원인 제6대 광주시의회도 과거 ‘집행부 거수기’ 비난을 들었던 과거 의회와의 차별화를 위해 의원 정책역량 강화와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의정혁신에 나섰다. 각종 연구모임과 토론회를 진행하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구태 여전=민선 5기 들어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대폭 물갈이되면서 시·도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광역·기초의회는 구태와 폐습을 반복하고 ‘자기 밥 그릇 찾기’에만 혈안이 돼 아직은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광주시의회는 출범

한 지 한 달도 안돼 집행부와 불협화음을 내는가 하면 도의회는 민주당과 교육의원으로 갈라 ‘집안 싸움’을 벌이면서 임기 초반 주민들을 실망시켰다. 반대 여론에 밀려 한차례 유보했던 권법 유급보좌관제를 한 달 만에 재추진을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광주·전남지역 일부 기초의회도 출범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앞다퉈 모두 ‘외유’를 떠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선거사범 전국 1위 ‘오명’=6·2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광주·전남 선거사범 숫자는 모두 905명. 전국 선거사범 4614명의 19.6%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선거사범 수(27명)는 서울(4.8배)의 5배가 넘었다.

전주전 전 서구청장, 전완준 화순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황주홍 강진군수 등 5명의 단체장이 기소됐고, 전주전 전 서구청장과 전완준 화순군수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전 전 청장은 자진 사퇴해 지난 10월 27일 서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졌다.

선거사범이 이처럼 많았던 것은 민주당의 ‘진흙탕’ 경선으로 인해 각 후보 진영마다 고소·고발을 일삼고 상대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을 무차별 퍼뜨린 게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음식점·미용실 이전 간소화 수수료 면제 노래연습장, 매년 3시간 의무 교육 폐지

서민 생활민원 개선 38개 과제 확정

행정안전부는 13일 음식점과 이·미용실, 정육점, 노래연습장 등 소규모 자영업소를 이전할 때 세 부담을 줄여 주는 등 생활민원을 개선하는 38개 과제를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규모 자영업소는 내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시 변경신고만 하면 돼 기존 신규 영업신고에 따른 수수료 등을 감면받고 교육도 면제받는다.

노래연습장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3시간짜리 교육이 폐지되고 개업 등 필요한 때만 교육을 받는다.

중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자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시한을 당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 늦추기

로 했다. 연장 대상은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등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자의 사업 상속 때 신고기간은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며, 차고지 변경 절차도 전출지와 전입지 2곳에서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전입지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게 된다.

장애인 차량, 택시 등 역학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자가 연간 2시간 받아야 했던 집합교육은 내년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와 서민을 위한 ‘햇살문’은 기존에 3개월간 연속 재직해야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등으로 인한 단기 공백이 있어도 대출 자격이 인정되는 등 조건이 완화된다.

저소득층이 학교 급식비와 운영비,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수수료를 감면받을 때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학교 또는 관공서 전산망으로 자체 확인해 처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자녀의 연령 범위 제한이 완화되고,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이 국민주택 외에 민영주택까지 확대된다.

갑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과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인을 꿈꾸는 제초 피아니스트 이노경(국어국문학과)

영화감독을 꿈꾸는 한의사 최현민 (미디어영상학과)

내 꿈에 하나 더!

다양한 강의방법 (TV, 멀티미디어, 출석수업 등)
등록금이 저렴하다 (일반대학 1/10, 사이버대학 1/5)
연계전공 운영으로 “사회복지학사” 취득
내 꿈을 더하고 키우는 대학,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내 꿈에 하나 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자: 2010. 12.1(수) ~ 2011. 1.12(수)
입학상담 | 광주전남지역대학 062)973-5100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nou.ac.kr) 참조